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25.(수)

동서울변환소 사업 협의서(안) 합의… 감일지구 주민투표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국회 '감사의 자리'를 계기로 3개월간의 동서울변환소 협의체 활동 마무리
- 제3자 검증 및 행정절차, 상생방안 등 담은 협의서(안)을 주민대표와 합의
- 감일지구 19개 단지 전체 세대주를 대상으로 협의서 주민투표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동서울변환소 주민협의체 감사의 자리' 계기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하여 그간 논의에 참여한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해당 단지 주민투표에 부칠 협의서(안)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동서울변환소 협의체 발족식 이후, 감일지구 주민대표와 기후부, 한전, 국회 이광재 의원실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민대표들이 제기한 대체부지 이전 문제와 전자파·소음 등 생활환경 우려를 놓고 제3자 검증방안과 주민 안전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에 부칠 협의서(안)을 최종 마련하였다.

협의서(안)에는 한전이 제출한 대체부지 이전 검토자료와 전자파·소음·화재 등 주민 안전·환경영향 자료를 제3의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절차가 담겼다. 한전은 검증과 병행해 동서울변환소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다. 최종 검증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해 요인이 확인되면 한전은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기후부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전에 요청한 뒤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건물에 전자파 차폐 소재를 적용하고 준공 후에는 주민과 함께 전자파·소음을 점검하는 방안, 감일지구 방향 차폐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 등 주민 안전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한전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감일지구 19개 단지 전체 세대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협의서 서명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되면 주민대표와 기후부, 한전, 국회 이광재 의원실에서 서명하며 협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석달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의서안 마련에 힘써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주민 우려사항을 검증할 절차를 함께 마련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하며, “정부는 주민 안전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상생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1-589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1-5894)
			전문관	이재준 (044-201-59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